
KOREA-INDIA DIALOGUE 2014

제13차 한국-인도 대화 결과 보고서

Toward a Renewed Relationship: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일	시	2014년 11월 6-8일 (November 6-8, 2014)
장	소	콘래드 서울 (Conrad Seoul, Korea)
공	동	주최 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지	원	
		한국국제교류재단 (The Korea Found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04	1. 공동 선언문 Joint Statement
07	2. 종합 보고 Executive Summary
14	3. 세션별 요약 Session Summary
15	제1세션: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와 리더십의 방향
	제2세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및 안보 현황과 양국 협력 방안
	제3세션: 경제 성장과 규제완화
	제4세션: 한-인도 무역 증진 방안 및 지역 경제 통합
	제5세션: 한국과 인도간 외국인 직접 투자와 산업협력의 확대 방안
30	Session 1: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 and New Leadership
	Session 2: Cooperation in Security and Diplomacy
	Session 3: Economic Performance and Deregulation
	Session 4: Enhancing Korea-India Trade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ession 5: Expansion of Mutual FDI and Industrial Cooperation
47	4. 참석자 명단 List of Participants
49	5. 프로그램 Program



Joint Statement

공동 선언문

JOINT STATEMENT

13th Korea-India Dialogue

7-8 November 2014

Seoul

The 13th Korea-India Dialogue co-organized by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and th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was held on 7-8 November 2014 at Seoul.

The dialogue brought together leading policymakers, academics, defense and security analysts and corporate leaders. The broad theme of the 13th Korea-India dialogue was Towards a Renewed Relationship: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e dialogue deliberations emphasized the following points:

- 1) The 12th India-Korea Dialogue had endorsed a number of measures that Korea and India can take to expand cooperation on common security concerns as well as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tability.
- 2) President Park's visit to India in January 2014 was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endeavor of Korea and India to consolidate their strategic partnership. The two countries are moving from a bilateral agenda to cooperation over regional and global issues.
- 3) Participants hoped that frequency of high-level visits between Korea and India will enhance.
- 4) Korea and India share a similar vision for East Asia in which they are well pois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ve efforts such as the EAS and the ARF. In this context the participants welcomed the positive role being played by various mini laterals involving India and Korea in strengthening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 5) Korea hopes that the new government in India under the forward-looking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will strengthen bilateral political partnership and promot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 6) A visit by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to Korea in the near future would provide a great fillip to the partnership, especially the "Make in India" initiative.
- 7) Speedy upgrading of CEPA and addressing the concerns in both countries that presently result in low utilization of CEPA.

8) In further strengthening of India-Korea economic engagement the following were principally underlined:

- Cooperation in defense production,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recent liberalisation of the FDI cap and regulations in India.
- Cooperation in civil nuclear energy where there is great opportunity for Korea to build civilian nuclear plants in India to power the country's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s. The two countries have already signed a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 Cooperation in ICT and space research given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complementarity between India and Korea - Indian strength in software and Korean strength in hardware.
- Encouraging cooperation between SME's from India and Korea especially in collaboration with big companies.

9) The participants suggested that an empowered group of experts to be set up for resolving the impediments in POSCO project in a time bound manner.

10) In light of growing economic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ncreasing people to people contacts, a commensurate increase in direct air connectivity must be accorded priority. Here the urgent revision of the 1992 Aviation Service Agreement to enable more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beyond is essential.

11) One tangible way of harnessing shared cultural and historical ties for strengthening contemporary relations would be joint film production between Korean Wave and Bollywood.

12)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14th India-Korea Dialogue would be held in India with a special focus on SME cooperation.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Rajat Kathuria

Director & C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Executive Summary

종합 보고

2014년 제 13차 한-인도 대화는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민 방문, 같은 해 5월 인도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양국의 정치·외교·경제 관계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감지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개최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중국, 일본 간의 세력확장경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과거 정부와 확연한 성격차이를 보이는 모디 정부의 출범으로 정치·외교·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인도의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한-인도 대화는 그 의미가 유난히 컸다고 할 수 있다.

제 1세션에서는 양국의 국내정치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리더십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개혁을 토대로,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는 모디 정부의 성격에 따라 변화될 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이를 추진해 나갈 리더십의 방향과 예상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과거 개발국가시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재에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성장패턴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의 정치 및 정책적 변화는 매우 역동적이며 변화무쌍한 측면이 있는 바, 복지정책의 강화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었다.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훌륭하게 유지해 왔지만, 필요 적절한 정책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도 측 참여자들은 모디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인도의 사회적 통합을 리더십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 정부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인도에 대한 외부의 시각도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 2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및 안보 현황과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인도 측 발표자는 모디 정부의 외교정책이 지역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및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건설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도 정부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안보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는 2010년에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설정되었지만, 아직은 '전략적'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 측 발표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외교안보협력 관련 입지는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며 한국의 정치·외교·경제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을 배제한 3자간 또는 4자간

안보협력체계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 측의 한 참석자가 북한의 실상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의 외교관계나 전략적 동맹 등에 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인도 측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는 6자 회담 보다 더 균형된 논의의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할 경우에 인도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 3세션에서는 양국의 경제현황 및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세션에서 한국 측은 주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 현재의 체계 및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데 비해, 인도 측 발표자는 인도의 현재 경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측 발표자는 현재 한국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소극적 자세, 이해단체 및 NGO의 영향력 증대 등이 앞으로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도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도 측 참석자는 모디 정부도 규제개혁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 측은 인도의 경제현황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노동개혁, 교육개혁, 도시화, 금융규제 완화 등도 앞으로 인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 4세션에서는 양국간의 무역증진 방안과 경제통합과정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측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간 무역이 보완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량이 감소하고 인도의 대한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등의 추세에 주목하면서 CEP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협정상의 관세 수준이 여전히 높고 협정에 나타나지 않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CEPA의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의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자유무역의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CEPA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 자유무역협정의 질적 제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등이 협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한-인도 CEPA가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결국, 양국 정부가 CEPA의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그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모든 참석자들은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양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공동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제 5세션에서는 양국간 상호투자확대 및 산업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 측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 잠재력에 비해 훨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의 공장설립형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대인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인도 측은 인도의 투자유치에 있어서 최대 약점이 인프라 부족과 물류체계의 미흡이라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측은 아직도 한국과 인도간에는 많은 측면에서 거리감이 존재하며 이러한 거리감이 결국 투자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인도 대화가 이번까지 13차례 개최되고 있지만, 그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한, 인도 측은 한국이 대인도 투자를 단기적 안목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요약: 채 욱 경희대학교 교수

The 13th Korea-India Dialogue was held at a critical juncture in the countries'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hip. Owing to Korean President Park's state visit to India in January 2014 and the launching of India's new administration in May 2014, a reorientation of their mutual interests had been paved beforehand. The Dialogue also came on the heels of a widening Indian role in the region amid heightened tension in East Asia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Moreover, the vastly different administrative direction of new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compared to his predecessors suggests a revamping of India's foreign policy and economy. As such, the 2014 Korea-India Dialogue was especially timely.

Session one of the Dialogue dealt with the leadership challenges when there are changes in the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Korean participants focused on current and planned reforms, while Indian participants delved into the possible policy outcomes of the Modi administration's polic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leadership. A Korean presenter said concentrated power orchestrated Korea's rapid postwar buildup but the current model must make room for various opinions and conflicting views because of the nation's democratization since the late 1980s. As Korean politics and its policies change dynamically,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a creative economy and strengthened welfare policies were mentioned as ways to achieve a new development model.

As for India, a democratic identity has been in place much longer than Korea but it was pointed out that India has fallen short of applying appropriate policies in an effective and timely manner. Indian participants said this is being addressed by the Modi administration. They emphasized that the new government is showing fundamental changes in that India's social integration is one of its primary goals. They also suggested that revised foreign perspectives of India are warranted, considering the Modi administration's highly decisive policy-making.

The agendas of session two were security iss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Korea-India bilateral security and diplomacy cooperation. One presenter from the Indian delegation deemed Prime Minister Modi's foreign policy to be constructive in that it promotes regional stability as well as pursues economic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Asia. He said that the Indian government may be seeking to strengthen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Asia. In contrast, he pointed out that India's relationship with China is ambivalent in the sense that although the need for economic cooperation is recognized, there is no shared vision for power balance in Asia. Lastly, regarding India's relationship with Korea, this presenter said that although a bilateral strategic partnership was established in 2010, it has not fully evolved into a "strategic" dimension yet.

Meanwhile, a Korean presenter claimed that acceptable positions on diplomatic and economic matt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very limited; in particular, taking into consideration Korea's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circumstances, a trilateral or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that excludes China is unrealistic. Lastly, a participant from Korea argued that Korea's diplomatic relations and strategic alliances cannot be discuss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North Korea. On this, the Indian delegation asserted that the framework for discussing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more balanced than the current six-party talks, and added that India may have much to contribute in realizing such a framework.

In session three, the Korean participants shared Korea's experience in regulatory reform and the consequential effects that are visible today. The Indian participants described India's economy and the challenges it faces. One Korean presenter explained that Korea's regulatory reform is led by the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RC) formed in 1998, and said the panel has done well in suppressing new regulations and alleviating or abolishing existing regulations. But the presenter also cautioned that the passive attitudes of bureaucrats and increasing influence of NGOs may hinder further regulatory reforms. One participant from India noted that as the Modi administration is showing considerable interest and effort in regulatory reforms, Korea's experience may serve as sound advice. Upon providing an overview of India's current economy, the presenter from Indi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Moreover, this presenter also stressed that labor reform, education reform, urbanization and financial deregulation are also crucial to India's economic growth.

In the fourth session, participants shared their views on how the two countries can cooperate in promoting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Korea and India have a complementary trade relationship but their bilateral trade volume is declining. The participants discussed problems and potential areas of improvement of the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It was repeated that the CEPA should be revised to extend its utilization and the effects of free trade. Many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tariff levels of the agreement are still high and that non-tariff barriers significantly limit utilization of the CEPA. Similarly, there was no disagreement that the global value chain, quality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should be addressed within the CEPA.

However, there was slight debate regarding how the improvements of the Korea-India CEPA would balance out the mutual benefits. Ultimately, it was concluded that more research is necessary to achieve appropriate improvements and increase utilization of the CEPA. Furthermore, all of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Korea and India need to assume key roles in th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in order to form a global value chain that maximizes mutual economic interests.

Finally, the agenda of the fifth session was expansion of mutual FDI and industrial cooperation. According to a presenter from Korea, Korean investment in India appears to be much smaller in volume compared to its potential because such investments (mostly led by big companies) are excessively concentrated on green field projects. This presenter noted that the problem needs to be resolved by actively promoting joint investments between Korea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SMEs), as well as by installing a special support system for expanding investments to India. Meanwhile, a presenter from India said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system is India's main challenge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is presenter said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drafting policies that may complement such weaknesses. Participants from India further claimed that a significant sense of distance between Korea and India in various aspects is undermining investments, and that although the Korea-India Dialogue has been held annually for 13 years, it seems the gulf has not narrowed. Moreover, participants from India stressed that Korean investments to India should be view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stead of from short-term projections.



Session Summary

세션별 요약

제1세션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와 리더십의 방향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 and New Leadership

지난 30년 간 인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적으로, 더 이상 인도의 가장 큰 개발 과제가 빈곤 퇴치가 아닐 만큼 빈곤율이 상당히 하락했다. 현재 인도의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인도는 비교적 인구가 젊은 국가인데 비해 일자리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년 노동 시장에 뛰어드는 천이백만 명 가량의 구직자들 중 구직에 성공하는 이들의 비율은 매우 적다. 또한, 인도 농촌 지역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그 동안 고용의 주 원천이었던 농업은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2014년 총선의 결과로 인도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도국민당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성공적인 총선을 치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과는 나렌드라 모디가 이끈 인도국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인도국민당은 자국의 개발 현실을 간과하지 않으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정부는 비즈니스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못지 않게 주목할 만한 점은 현 인도 정권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2014년 총선 이전 10년 동안의 인도 정부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잦은 혼란을 경험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매우 확고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도 사회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모디 정부는 정책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전 정부의 정책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등 국가 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 구조와 관련하여 모디 총리는 통합적인 성격의 정부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무 총리실을 의사 결정 과정의 허브로 복귀시켰다. 이는 사회 통합을 구축하고 국가의 목적을 위해 여러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인도 정부는 여러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 60년과 같은 시각과 태도로 인도를 바라보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의 국내 정치와 정책 변화는 때로는 예측이 힘들 정도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의 10가지 주요 정책변화, 그리고 국내 정치 개혁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 시점까지의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복지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10가지 주요 정책 변화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국방 및 교육 지출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복지 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2015년에 국가 예산의 30% 정도가 복지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총 376조원 중 113조원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책적 수렴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보수 진영은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복지 국가의 실현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안보 및 국방 문제들 틈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래의 사회 정책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조 경제는 현 정부의 정책들 중 가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책임과 동시에,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창조 경제의 세 가지 핵심은 1)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경제 리더십 다양화, 2) 주요 생산품의 다양화, 그리고 3)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다. 정부의 역할 면에서 기존의 한국 정부는 규제 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 경제가 건강한 기업 생태계(ecosystem)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이 변화해야 할 것이며, 변화의 동력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위 관리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환영 받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치 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 사회는 자유 경쟁 선거제도 그리고 안정적인 정당 체계와 더불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정기적인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 대화의 중심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인 측면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승자 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Westminster model)에서 권력 분산(power sharing) 형으로 점차 변화해왔으며, 최근에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적 변화는 심각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위기가 없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정치적 발전에 있어서 한국과 인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거버넌스가 발달하게 된 순서이다. 최근 저서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에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국가(state), 법치(rule of law), 그리고 책임(accountability)이 구축되는 순서는 정치·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인도의 경우에는 식민지배 혹은 인도 문화 자체의 영향으로 법치가 국가의 발전을 선행했다. 또한 인도는 지난 60년 동안 민주적 책임감이 강한 사회를 보여줬지만 필요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결여되어 있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발전이 법치와 민주적 책임의 발전을 선행했다.

발전지향적 국가의 최우선 사안은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이다. 따라서 발전지향적 국가들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관료제도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긴밀한 정부-기업간 관계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출지향적인 경제 전략을 추구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비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지향적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기능과 정당성이 상충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 정당성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국은 1987년 이후 활발한 선거와 정치적 참여를 계기로 국가의 정당성을 많이 회복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회가 여러 면으로 고전을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인도도 경험을 했으나 인도의 현 민주주의 사회는 약간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상당히 원활하게 작동 중이다. 인도가 지금 당면해 있는 과제는 민주주의에 필적하는 효과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인도를 발전지향적 국가의 틀에 맞춰 개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자유 선거를 경험한 인도 사회에서 이러한 시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요약: 정 구 현 카이스트 초빙교수

제2세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및 안보 현황과 양국 협력 방안 Cooperation in Security and Diplomacy

인도 측 발표자는 먼저 인도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것은 양국 신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양국관계의 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에 대한 인도의 관심은 인도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우선이다. 여기에는 해양안보는 물론 글로벌 공유지에서의 자유, 국제법에 따른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이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왔다.

인도 신정부가 지역안보에 대해 얼마나 건설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지는 모디 총리의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모디 총리는 지역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18세기 팽창주의와 다를 바 없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인도 역시 국가개발이라는 염원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코 지역 패권주의에 의존하지 않았다. 모디 총리는 2014년 10월 인도가 글로벌 경제의 한 축으로서의 물론 글로벌 및 지역 안보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것이 이제 세계인들의 보편적 기대라며 오히려 책임을 강조했다.

인도 신정부는 3가지 측면에서 인도의 외교정책 영역을 진전시키고 있다. 첫째는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된 정부를 바탕으로 인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둘째는 지난 5개월간의 패스트 트랙 외교를 통해 인도의 전략적 포부를 강화하고 많은 분야에서의 외교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모디 총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차별화된 관계형성을 위한 정교한 균형을 유지했다.

지난 5개월 동안 변화된 인도의 외교정책에 따른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세계와 함께 인도의 국가적 이익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약속이기도 하다. 첫째는 선명성과 확신을 통한 인도에 대한 신뢰도의 회복이다. 둘째는 주요 각국과의 실질적인 관계 증진이며 셋째는 민주주의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소프트파워를 추구하는 것이다. 넷째는 경제적 목표와 안보적 이해 간의 조화이며 마지막은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Look East, Like West"이다.

인도-일본 관계는 Special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 관계로 경제적 이해는 물론 다른 부문에서의 이해를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방위협력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양국은 이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헌법의 제약이 있지만 인도양 및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인도-미국 관계는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상당히 복원되었다. 미국은 인도의 경제개발 의제를 지지했고 양국은 지역 안정 및 안보 협력,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연계한 협력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 단기적으로 양국 관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다.

인도-중국 관계는 전략적으로 협력적인 동시에 경쟁적인 것이 공존한다. 양국은 오랫동안 국경분쟁을 겪어왔고 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에 대한 어떠한 공동의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 모디 총리는 지난 양국 정상회담 환영사에서 중국의 국경문제 야기 및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진전 없는 경제협력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와 한국은 2010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양국관계를 보면 경제, 정치, 외교, 국방, 지역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협력의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는 한반도에서 한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보다 ASEAN+3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한국측 참여자는 이것은 이미 지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안보정책의 핵심 축은 미국과 동맹국들이며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협력보다는 인도가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안보 체제에 대해서 인도 측 발표자는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아세안확대해양포럼(EAMF)등과 같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국측 발표자는 미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미국은 일본, 호주와의 삼각 안보협력에 한국과 인도를 포함하는 안보협력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지역안보 체제에 인도를 포함시키는 것에는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호주는 반대해 왔다. 하지만 2013년 미-일-호 전략대화(TSD)에서 호주가 인도를 포함하는 사자협력 가능성에 여지를 남기고 인도-일본, 인도-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3개국 해상군사 훈련이 합의되면서 이 이슈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가 이 체제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과 호주, 한국과 호주 간의 안보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면서 미국의 지역 안보체제에 대해 한국의 동참 여부도 이슈이다. 한국에는 이에 대해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고려한 부정적인 입장과 중국 견제용의 긍정적인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소규모의 안보협력 정도가 현실적일 것이다. 인도와 한국이 이 체제에 동참한다면 일방주의를 견제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한 참석자는 인도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중국의 미국으로의 분리 전략의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하고 인도를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미국 등을 통해 국방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중국을 활용하여 세계질서를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 다른 한국의 참석자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적 동맹에 대한 입장은 북한 문제를 배제하고 논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도 측 참석자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기존의 6자 회담보다 더 균형된 논의의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도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요약: 조 총 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 팀장

제3세션

경제 성장과 규제완화

Economic Performance and Deregulation

한국의 규제개혁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과감한 규제총량의 감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년 내에 존재하는 규제의 50%를 감축한 성과를 냈는데, 이후 이런 방식의 규제총량 감축 정책을 ‘규제 길로틴(Regulatory Guillotine)’ 이라고 부르고,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다른 나라에 권장하는 모범사례가 되었다. 인도는 새로 취임한 모디 수상이 규제개혁을 통해 인도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은 인도의 경제개혁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매우 강력한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한국경제는 소수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해졌다. 1980년대부터 한국정부에서 규제개혁이 주요 정책과제가 된 배경이다. 초기에 규제개혁은 주로 민간이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규제공무원들이 민간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업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낼 수 없었고, 산업안전 식품위생, 환경보호, 조세행정 등 규제개혁의 영역이 발생하게 되었다.

규제개혁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이었다. 이 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의 모든 신설 강화 규제 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한국이 규제 전수를 등록하도록 한 시스템을 가진 유일한 나라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6개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으며, 17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1998년에 김대중대통령이 1998년 말까지 등록된 규제의 50%를 폐지하도록 지시하였다. 모든 정부부서는 자체적으로 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각 정부부서는 잔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위원회에 입증하도록 하였다. 즉 규제 필요성의 거증책임을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지도록 한 것이 중요한 차별성이다.

당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으며,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와 현존 규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규제 전반적 품질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수단의 품질관리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면허제, 가격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고,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같은 사회적 규제는 그 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2) 원칙금지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3) 규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와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줄인다. 4) 준수율이 낮거나 규제의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큰 규제는 폐지한다. 5) 국제 규범과 조약에 반하는 규제는 폐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규제환경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규제개혁의 첫 번째 장애는 공무원 조직의 저항이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애는 규제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 이익집단의 저항이다. 지금 한국의 규제개혁은 이익집단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한국 규제개혁의 이런 경험이 인도의 경제개혁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인도 측 한 참석자는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은 현재 인도의 새 수상과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인도 경제를 과도한 규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개혁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인도의 경제전망은 밝은 편이다. 인도경제는 2015년에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거시경제적 불균형도 존재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인도는 8.1%의 빠른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최근 성장률이 4.6%로 하락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다. 경상수지 적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다.

인플레이션은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많이 낮아졌지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았다. 재정적자도 투자나 자산형성 없이 이자지급과 보조금 증가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

반면 자본의 유입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투자 확대는 경제회복에 중요하고, 모디 수상이 투자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4-2005년 인도의 높은 성장률은 높은 투자 때문이었다. 최근 인도의 성장률 하락은 투자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GDP의 2%에 달하는 투자프로젝트가 중단상태에 있다. 인도의 투자 감소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인도 투자 부진의 2/3은 국내 문제 때문이다. 낮은 이자율이 투자를 다시 활성화하고 구조개혁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인도의 농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슬로건이 “Make in India” 이다. 이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 때문이었다. 인도는 이 분야에서 취약하다. 인도의 초등교육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향후 10년간 매월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인도의 증가하는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 인도 도시들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농업만으로는 증가하는 노동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

도시화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인도 GDP의 2/3가 도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이 긴요하다. 그러나 인도의 도시들은 인구와 이민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모디 수상의 도시 개발 정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도 도시민들의 삶의 질은 각 도시들의 시장과 지방정부에 달려있는데, 그들은 도시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대다수 인도 국민들은 금융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개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에 개혁이 필요한 법과 규제들이 있다. 규제개혁을 담당할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위원회의 규제개혁 모델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독립규제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성장의 좋은 모델이다. 상당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했고, 인도도 이렇게 해야 한다. 양질의 정부개입이 한국의 성공을 이뤘다. 인도도 그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

요약: 김 종 석 홍익대학교 교수

제4세션

한-인도 무역 증진 방안 및 지역 경제 통합

**Enhancing Korea-India Trade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한국과 인도간 무역에 있어서 한국이 서비스 순수입국인데 반해 인도는 상품의 순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무역은 대체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에 있어서도 한국이 상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비해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도가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보완적 무역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인도의 대한 무역적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CEPA의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국의 관세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인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과 맺은 다양한 무역협정으로 인해 상품무역에 적용해야 할 특혜관세체계가 매우 복잡해서 기업들의 거래비용이 높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특히 MFN관세율 데이터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들이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때 얻는 혜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협정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관세수준이 일반적으로 인도의 관세수준보다 낮기는 하지만, 농산물, 수산물 등 인도가 비교우위를 갖는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엄격한 위생검역조치를 취하는 등 비관세 장벽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 양국 모두에 존재하는 관료적 장애요인도 적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인도의 포스코 냉연강판 공장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국의 문제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불필요한 검사나 불합리한 절차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상실되는 기회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지만, 양국 모두 가치사슬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가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상당히 낮다. 한-인도 CEPA가 체결된 이후에도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도가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와 맺은 무역협정 이후에 나타난 투자의 증가추세와 크게 대조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의 기업들이 M&A에 의한 투자보다는 지나치게 공장설립형 투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대인도 투자의 대부분(80%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의 대한 투자는 아직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증가추세에 있는데, 주로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M&A형 투자가 대부분이다.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이슈는 ‘과연 한-인도 CEPA가 지역경제통합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모두 지역경제통합과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을 염두에 둔 지역경제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도 CEPA는 한국이 맺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지역무역협정에 비해 자유화의 정도가 매우 낮다. 에너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수송, 관광, 정부조달 등 한-인도 CEPA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CEPA에 반영한다면, 향후 경제통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2014년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민 방문 시, 양국 정상은 무역증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따라서, 한-인도 CEPA도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양국의 관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균형 있는 협정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인도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기술 분야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한국의 우수한 디자인 및 조립기술 등이 인도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협력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 구축 역시 양국의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양국 모두 국가차원에서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되어야 한다.

한-인도 CEPA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자유무역협정의 질적 수준, 그리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무역관련 비용과 조정비용이 낮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류 및 수송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인도의 효율적 물류체계구축을 위한 경제회랑건설에 참여한다면 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에의 맞춤형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포괄적 FTA”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한-인도 CEPA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비교적 포괄적 협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는 상당히 많다. 정부조달 분야에서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관세를 재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인도의 평균 관세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련 관세는 높은 편이라 협정을 개선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도의 서비스 분야는 발전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기본적으로 무역협정의 서비스 분야와 투자 조항들은 제조업 분야의 개방이 미진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사실상, 인도의

제조업 분야는 발달이 덜 된 상황이라 보호장벽도 상당히 많으며 개방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지만, 서비스 분야의 개혁은 제조업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 양국 정부는 CEPA의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그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들을 효과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위한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도 한국과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주로 수출촉진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수출보다 오히려 내수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모디 총리의 “Make-in-India” 캠페인도 경제적 역량 측면에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거대한 인도시장 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인도의 제조업 육성과 고용 증대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 양국간에는 상호 불만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그만큼 협력과 개선의 여지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한-인도 CEPA가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도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CEPA 및 RCEP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요약: 채 욱 경희대학교 교수

제5세션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확대 방안 및 산업 협력
Expansion of Mutual FDI and Industrial Cooperation

제 5 세션에서는 두 나라간의 직접투자와 산업협력의 확대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한국 측 발표자는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가 2000년 이후에 상당히 침체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1992년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한 이후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상당히 활발했다. 특히 1996년 이후 수년간 현대자동차, LG전자와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도에 공장을 세웠으며, 1996-1999년의 기간에는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규모는 일본기업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기업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자료에 의하면 2000-2014년 8월까지의 14년 동안의 인도 내 외국인 직접투자 총누적액에서 한국의 비중은 1%가 되지 않는 반면에 일본과 싱가포르의 비중은 각각 7.5%와 12%였다.

21세기 들어서서 한국기업의 대인도 직접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가장 명백한 요인은 오디샤(Odisha, 영어식 표현 Orissa) 주에 건설을 시도했던 포스코의 일관생산 제철소가 실현되지 못한 점이다. 포스코는 2005년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오디샤 주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인도정부의 환경규제와 용지매입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 이 프로젝트는 진전되지 못했고 양해각서도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현재까지의 실패가 다른 한국기업에게 좋은 시그널을 주지는 못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인도투자가 부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중견 및 중소기업의 인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초기 한국 대기업의 투자는 제조업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방식(greenfield)에 의존했고, 또한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서 인도는 수출을 목표로 하는 중견이나 중소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물류비용도 만만치 않다. 결과적으로 아주 소수의 한국 글로벌기업은 고품질이나 브랜드를 바탕으로 인도에서 유리한 시장 위치를 점하였으나, 이들 기업의 뒤를 이을 다른 한국기업의 투자가 따라오지 못한 것이다.

지난 14년간 이처럼 직접투자가 부진한 것은 두 나라 간에 자유무역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다. 한-인도 CEPA는 2009년에 협상이 타결되고 2010년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CEPA에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조항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의 자유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CEPA 발효 후인 2011-2014년의 기간에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의 인도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인도투자는 계속해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CEPA가 한국의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에 별로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 측 발표자는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특구와 같은 새로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 측 발표자는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도 산업은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산업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인도는 국내소비용 노동집약적 상품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는 IT 서비스, 영화, 기타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도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제약산업이 가장 성공적이며, 인도의 자동차 산업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산업의 공통점은 이들이 상당한 고급인력 내지는 기술인력에 의존하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인도의 Tata나 Mahindra, Reliance와 같은 대기업은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며, 특히 Infosys나 Tata Consultancy와 같은 IT 서비스기업은 이미 글로벌기업이 되었다. 이들 대기업은 인재육성에 매우 적극적이며 우수한 인도 대학의 졸업생을 적극 유치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 물론 인도경제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따라서 물류비가 높아서 많은 애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모디 정부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인도 제조업의 기반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새 정부는 수출자유지역이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제한된 지역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 전국의 인프라를 근대화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모디 정부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규제도 완화해 나갈 것이다.

한 인도 측 참가자는 앞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유망한 산업으로 IT(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포함)산업과 조선업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인도는 조선업에 필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기술 및 자본과 결합하면 인도의 조선업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인도 CEPA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특히 서비스교역, 산업표준의 단일화, 경쟁정책,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한국 측 참가자는 20년이 넘는 양국의 활발한 경제관계와 FTA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활발한 직접투자를 저해하는 거리(distance)에는 물리적, 경제적, 행정적 및 문화적인 거리가 있는데, 한국과 인도 간에는 이 네 가지의 거리가 모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국 간에 항공편도 아직 매우 부족하며, 문화 교류도 활발하지 않다. 정부의 규제도 여전히 큰 장애물이며 소득과 소비수준의 격차도 큰 편이다. 이러한 거리를 단축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도에 한국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양국이 경쟁력이 갖고 있는 영화산업부터 협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른 한국 참가자는 인도 경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1세기에 경제성장이 가장 유망한 지역은 아프리카인데, 인도는 한국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인도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많은 인도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인도는 한국기업이 남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기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도에 사업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세션에서는 금세기 들어서 한국과 인도 간의 직접투자와 산업협력이 매우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양국 기업의 협업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

요약: 정 구 현 카이스트 초빙교수

Session 1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 and New Leadership

India has changed fundamentally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For one, poverty no longer is the biggest obstacle to development, having fallen sharply. Moreover, agriculture cannot sustain as the leading sector of employment due to major structural shifts in the countryside. Today, the biggest economic challenge is a burgeoning imbalance in worker supply and demand; 10-12 million new job seekers enter the labor market annually but only a small percentage is hired.

Hoping for solutions, Indian voters turned to the Bharatiya Janata Party (BJP) in 2014 general elections. Defying expectations that its tilt to the right would dissuade support, the BJP led by longtime politician Narendra Modi scored a decisive victory, producing India's first administration in 30 years with its own parliamentary majority. The BJP does not overlook the development realities of India, and it is committed to a market-based philosophy. In short, the administration believes in business.

No less noteworthy is the style of leadership now at the helm. During the 10 years preceding the general elections, confusion frequently accompanied government policy. Modi, now the prime minister, is decisive and unambiguous. His decisions are of complete certitude and clarity, which is welcomed in the Indian society. Modi's government has taken ownership of ideas that originated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shaping them into its own brand of policy changes and reforms. The orientation is toward national integration. It should eventually lead to "equality of empowerment," replacing "fragmented entitlements" that have reigned the past 50 years.

As for government structure, Modi is installing organic ministries and reinstating the Prime Minister Office as the hub of decision making. One of the principle goals is regaining national social consolidation and government capacity to mobilize resources for national purposes. In other words, the new administration is a national government lead by a nationalist leader.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calibrate the way India is viewed. The Indian government is fundamentally changing, and it would be a mistake to regard India the same way as the past six decades.

Domestic politics in Korea and the policies changes i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re dynamic, full of energy and sometimes unpredictabl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wo main aspects -- ten major policy changes and domestic political reform. What are the accomplishments so far, and what should be the goals?

Among the policy changes, welfare stands out. Although Korea's welfare expenditures still lag behind

other OECD countries, spending is rapidly snowballing, the demands from the military and public schools notwithstanding. Next year, welfare will consume 30 percent of the national budget, 115 trillion KRW out of 376 trillion KRW. Politically, it is the result of a huge policy convergence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Since her election in 2012 election, President Park has orchestrated change; conservatives are trying to accommodate a very active government policy to cope with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Nevertheless, the Korean welfare state does not seem completely rosy and promising. We will have to see whether Korean politicians can exert prudence and a long-term balanced perspective on future social programs even with the many security and defense issues at hand.

Policies for a “creative economy” also deserve special attention. This is probably the least understood concept of the Park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its economic policies. It seems to rest on three pillars: 1) change and diversification in the private sector’s economic leadership with conglomerate-led growth being replaced with active incorporation of SMEs and start-ups; 2) diversification of major products; and 3) a redefined government role. Regarding the latter, the Korean government used to be called a regulation leviathan. But now that the leviathan is under the WTO umbrella, the government’s role should shift to sustaining a sound ecosystem within the Korean economy. This shift needs to be initiated and driven by the government itself. However, this is not widely welcomed by senior officials. Therefore, many uphill tasks remain in transforming the government role.

Regarding domestic political reform, many intellectual debates have concluded that democracy in Korea has already consolidated, for it has stable, free and competitive elections, stable party systems, as well as regular government alternation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e political conversation now is in terms of quality of democracy.

Korean democracy over the last 20 years has gradually changed from the Westminster model (winner takes all) to a power-sharing model.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voices urging further changes toward a consensus democracy. But the chances appear to be slim for new rules in the game unless there is a deep sense of political or economic crisis. In such dire conditions, political entrepreneurship would be needed to spearhead complicated changes.

The one big difference between India and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seems to be the sequence in which their governance developed. Francis Fukuyama’s recent book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argues that the order in which a state, the rule of law and accountability are established greatly influences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India, the rule of law preceded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perhaps as a legacy

of colonialism or Indian culture. India's democratic accountability has been working fairly well for more than 60 years, but it still lacks a strong state that can effectively implement necessary and appropriate polici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state preceded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and accountability.

During a developmental state period,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is considered the top priority. Thus, developmental states invest in a strong and effective bureaucracy and tolerate clos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s. They also promote export-oriented economic strategies and spend enormous resources on cultivating human resources and education. In this respect, performance and legitimacy may clash. As a result, developmental states may not claim legitimacy at times but they enjoy economic growth.

Korea has enjoyed legitimacy since 1987 due to competitive elections and wider political participation. Now it is experiencing so-called "Korean sickness." The primary symptom in Korea is a struggling National Assembly. This phenomenon may have existed in India before. But today the Indian democracy seems to be working smoothly even amid some elements of chaos. India's task is to create an effective state to accompany its functioning democracy. Accordingly, Prime Minister Modi seems to be trying to place India into the mold of a developmental state. This process will not be smooth for the Indian society has already experienced free elections.

Session 2 **Cooperation in Security and Diplomacy**

Understanding how India's new government is approaching foreign policy is essential as well as the new relationships that it is attempting to establish. India's security interest reach across the interconnected Asia Pacific and Indian Ocean regions in topics that include maritime security, freedom of global commons, and peaceful settlement of maritime and territorial disput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tensions have risen in Asia, this emphasis on peaceful settlement of maritime and territorial disputes has become more prominent in the discourse.

India's government has a constructive approach towards regional stability in achieving what Prime Minister Modi calls a "rejection of 18th century 'expansionism' and a path of democracy and "developmentalism" for an Asian century." In terms of India's posture, it is motivated by robust national interests, but its nation-building dream is not based on notions of regional dominance. And finally, there is recognition of India's

regional responsibilities within the new government. Prime Minister Modi stated in October 2014 that “there is a universal current of expectation from India to emerge not only as one of the poles of global economy, but also as one of the anchors of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There are basically three areas of foreign policy evolution in the Modi government. The first is India’s reinvigorated external profile based on prospects for strong leadership and government stability. Secondly, Prime Minister Modi’s “fast-track” diplomacy in 2014 has elevated India’s strategic ambition and also signaled discontinuous change in foreign policy in many ways. Lastly, while handling important summit meetings with precision, Prime Minister Modi has struck a fine balance between transformative and transactional elements to build differentiated partnerships with the world’s major powers.

The new framework emerging from the five months of “MODI-fied” foreign policy is a fresh way to engage the world to promote India’s national interests. The first element is restoring India’s credibility with a posture featuring clarity and conviction. The second is pragmatic engagement with all major powers, each on its own merit. Next, is projection of the soft power of democracy and universal values that India upholds. This has existed all along because India is a democracy. But Prime Minister Modi’s belief in values is very strong, as seen in his engagements with major powers, especially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e new framework entails the full alignment of foreign policy with India’s domestic economic goals, and security interests as well as global aspirations of young India.

Another important aspect that defines the framework for strategic engagement is the “Look East, Link West” approach, which is yet to be crystallized. Basically, the “MODI-fied” framework of strategic engagement is a re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India’s relationships based on a bandwidth of “strategic components. If there are mutually beneficial ties in multiple domains, it is called a partnership. An added transformative element of serving each other’s fundamen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s a “Strategic Partnership.” And a broad convergence of interests that has the capacity to fundamentally impact the balance of power to mutual advantage (regionally and globally) is a “Special Partnership.” India, unlike South Korea, does not have alliance partnerships so its maximalist partnership configuration is the “Special Partnership.”

Prime Minister Modi’s dealings with Japan can be summarized as “special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 that shares values and interests as well as commits to each other’s national strength and economic vitality. Defense cooperation was initiated and bilateral discussions are under way to get it started. As Japan addresses constitutional constraints, increased cooperation for maritime security across the Indo-Pacific can be expected.

In his dealings with Washington, the new prime minister has restored strategic direction and high priority to the India-U.S. relationship. He has engaged vital constituencies in the United States (politicians, business leaders, etc.) to sustain a long-term strategic partnership. Prime Minister Modi has also secured President Barack Obama's support for his own domestic agenda in India's economic rise. Overall, there is enhanced security cooperation to advance shared interests i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both bilateral and in conjunction with Asia-Pacific partners like Japan. Some short-term stress may continue. However, in the long run, Indian and U.S. interests are more than likely to be closely aligned.

Prime Minister Modi made exceptional gestures in welcoming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But as seen from the outcomes, this is a strategically important relationship which has cooperative, competitive, and even adversarial components. India has major border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and they have flared periodically into incidents, creating instability and distrust. Moreover, there is no shared vis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balance of power in Asia. Thus, Prime Minister Modi, while welcoming President Xi, made it clear that even progress on economic relations would be difficult to sustain in the face of China's border claims and the absence of progress in resolving the territorial dispute.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India and Korea was established in 2010, and President Park's visit in January 2014 reflects the geopolitical importance both countries attach to bilateral ties. However, bilateral relations have not advanced into "strategic" dimensions. For that, fresh momentum is needed to advance into economic, political, security, defense and regional cooperation.

Mutual understanding on regional geopolitics needs to be established. While India readily shares Korea's concerns on Korean peninsula issues, it is far from clear whether India fits into Korea's vision for East Asia. Korea may be placing more emphasis on ASEAN+3 (Korea, Japan and China) rather than the East Asia Summit. One Korean participant commented that this view is a bit outdated, considering that the central axis of Korea's security policy is now the U.S.-led alliances. Korea's vision for East Asia is for U.S.-led bilateral alliances to be the backbone of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for a regional framework to complement the alliances to produce synergistic effects. In this sense, the highest priority of the Park government is Asia-Pacific cooperation, including India, rather than East Asia cooperation, which is rather centered to ASEAN+3.

Another Korean participant pointed out that Korea's position on diplomatic relationships and strategic alliances is difficult to discuss without talking about North Korea. On this, an Indian participant responded that there is a need for a more balanced framework other than that of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e continued that India may be able to contribute in this aspect.

With respect to regional architecture, India supports the increment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AS forum, including through the fine-tuning of interlinked ASEAN-led processes like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ASEAN-Plus Defense Ministers Meeting (ADMM+) and the Expanded ASEAN Maritime Forum (EAMF). India also hopes that Korea and Japan can transcend historical issues, which block progress toward a meaningful India-Korea-Japan Trilateral Dialogue.

The United States is also attempting to create a un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U.S.-Japan-Australia) to a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at includes India. As evidence, Australia recently has been very cooperative with the United States in deploying U.S. military assets on Australian soil, including allowing the rotation of U.S. marines. India, on the other hand, has conducted more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than any other country in Asia.

In the past, thoug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ried to expand to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idea had been dismissed by Australia. Australia has distanced itself from any suggestion of ganging up on China because of its economic ties with China. However, Australia's position seems to be changing after the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 meeting last year; Australia has left the door open for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oreover, there was a summit meeting between India and Japan in 2014 in which the two countries agreed to hold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gularize their bilateral naval military exercises. Thus, revisiting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or spatial discourse of the Indo-Pacific has gained popularity in Australia and India as well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India is not very bright if common views on detailed security issues are not shared with India. This is because India might have a somewhat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the prospects for increased inter-Asia trade with respect to China.

But if realized, the Indo-Pacific can be utilized as common ground for the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spatial discourse of the Indo-Pacific would serve to prevent regional integration from being inward looking and exclusive. That is, the Indo-Pacific could act as a super-region designed to deter China-centric order.

At present,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and South Korea is on the rise,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Australia has been remarkably enhanced. Such heightened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implies the possibility of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se four states, o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ustralia or one among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However, there are pros and cons associated with the idea of institutionalized trilateral or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ritics argue that South Korea should distance itself from anything that suggests ganging up on China due to its close economic ties. They also are pessimistic about such unilateral efforts developing into a very durable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in the foreseeable future exactly because Korea tries to avoid the impression vis-a-vis China. Moreover, because this kind of security cooperation might be seen as an anti-Chinese condominium, any attempts to develop the idea should clearly state the rationale and goal is to deal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roughout Asia without specifying China. The critics also, warn of the possibility of Japan emerging as a security hub at the expense of South Korea's interest. On the other hand, pros of the idea argue that such institutionaliza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newly emerging security issues. Furthermore, due to China's negative view of such linkage among the four countries, discussions of institutionalized trilateral or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ay even function as leverage.

But again considering that South Korea should not unnecessarily provoke China, maintaining a minimal level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ay be optimal. Once a stable trilateral relationship is established, India and South Korea could seriously discuss their common strategies under the framework of an expanded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Meanwhile, one way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provoking China may be to invite it to military exercises.

One participant pointed out that in terms of the U.S.-India-China triangular relationship, the China-India relationship is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ia is in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utilize India to constrain China, while China is seeking to separate India from the United States. By the way, India should strengthen its deterrence capability towards nuclear weapons to deal with the growing gap of military capability between India and China. At the same time, India needs to treat China as a strategic partner in the transformation from a unipolar to multi-polar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these sets of bilateral relationships (China-India, U.S.-India) with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which bilateral relationship should be emphasized more?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ich one is the central axis of India's diplomacy and security strategy in the Asia-Pacific region?" needs to be answered.

Session 3 **Economic Performance and Deregu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egulatory reform efforts of the last two decades can be summed up as a "Guillotine Approach." Immediately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regulatory reform was far-reaching

and radical, axing half of the regulations within one year. The results were quite successful. Prime Minister Modi seems to be orchestrating many efforts to increase economic prosperity through regulatory reform. In this respect, Korea's experience may be a useful reference.

Korea had one of the most regulated market economies in the world because its development was state led. By the 1980s, however, the Korean economy was too large for the government to handle its inefficiencies and distortions. Regulatory reform was launched but this early effort, which pitted bureaucrats against the private sector, was mostly driven by political need and proved ineffective. Eventually, the reform drive fragmented into sacred areas of regulations (worker safety, food and drugs, tax administration, etc.).

Major reforms emerge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 then President Kim Dae-Jung enacted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BAAR). Its elements included the formation of the Presidential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RC) and a procedure only employed by Korea -- registration of all regulations.

In April 1998, the president ordered the elimination of half of all regulations by the end of the year. Furthermore, each ministry had to submit a full listing of its surviving regulations and justify keeping them. This burden of proof became an important key feature of Korea's regulatory reform process.

The RRC, the key instrument in implementing the guillotine, is still operational today. It remains under the President's supervision with the prime minister and a civilian acting as co-chairman. In addition, two-thirds of the committee members are required to be civilians. The two main functions of the RRC are controlling the flow of new regulations and controll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As can be seen, the aims of the guillotine approach are controlling the stock of regulations; controlling the quality of new regulations;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Another notable feature in the RRC's review procedure is that relevant laws approved by parliament are not subject to review.

The following RRC missions are applied to the regulations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across the board: 1) Economic regulations such as licenses, price controls, will be deregulated, while social regulation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not to be abolished, but made efficient and effective; 2)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will change from negative to positive. The underlying principle of many regulations is denial with permission the exception. The approach should be in reverse; 3) Transparency of regulations will be increased. Possibl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will be subject to review and recommendation for modification. 4) Regulations with low compliance rates or those with costs that outweigh the benefits will

be eliminated. Redundancy of regulations will also be reviewed. 5) Regulations that contradic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global standards will be eliminated. These principles along the proactive regulatory committee have bee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for more than 20 years.

As noted earlier, the first hurdle was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passive toward reforms. Once the political will overcame bureaucratic resistance, a second wave of resistance came from interest groups and NGOs. This is the challenge that we face now. Hopefully, Korea's experience can provide insight to India as it embarks on economic reform for enhanced prosperity and growth. Indeed, one Indian participant pointed out that the Korean reform process resonates with what India is currently experiencing under the nation's new leadership and new administration. The new leadership is keen on taking this reform process forward under the notion that government should stop excessive economic protectionism.

On the global economic stage the outlook looks bright for India. Still, domestic issues are weighing on performance.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dian economy grew 8.1%. It has decelerated and is projected to increase by 6.4% in 2015, but the recent indicators suggest 4.6% expansion instead. Very high inflation (CPI) and fiscal deficit are other drags on the economy, and the current account deficit also needs to become more manageable.

Specifically, food and fuel inflation has been extremely high. However, relief is appearing; the global oil glut has sharply depressed fuel costs and food prices are trending downwards as supply sides react. As for the fiscal situation, revenue deficit is very high, which means that the deficit is expanding without introducing any asset creation or productive investments. This is a serious concern because it means interest payments and subsidies.

Capital inflows, on the other hand, have been steady. But revival in investment growth is the key to recovery, which is currently a policy pushed by Prime Minister Modi. All of these initiatives speak to the issue of how to attract investment in India. Hefty investments propelled India's high growth rates in 2004-05. Thereafter, investments ebbed and the growth rate declined. Currently, projects worth of 2% of the GDP (including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are on the drawing board but not being pushed forward. Reviving investments therefore is seen as a key ingredient. The external environment cannot be blamed for much of the decline in investments. Rather, two-thirds of the problem is homegrown. Accommodative interest rates and structural reforms should revitalize the investment cycle and kick-start further growth.

In the microeconomic perspective, India's jobs are still highly dependent on the agricultural sector. Hence, to lift incomes and GDP, job creation efforts should b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Getting manufacturing back on track is therefore crucial. Suggestions to how to achieve this goal include "Make in India." The role for the government here is to step in when there is market failure by providing resources such as infrastructure. Korea's growth was built on huge investm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dia seems to have failed in this respect. India's primary educational system is currently dysfunctional and needs improvement.

Moreover, labor reform is necessary to boost the manufacturing sector. India has to create one million jobs per month for the next ten years to accommodate its ballooning labor force. The fact that the urban employment is negative can become an existential problem if not resolved. Agriculture cannot go on absorbing the majority of the work force.

Urbanization is another serious problem. Two-thirds of the GDP comes from cities. However, India's cities are not capable of absorbing attendant labor force and the continuous migration into urban areas. Huge amounts of urban infrastructure buildup are required. Here, Prime Minister Modi's initiative on supporting growth of cities is essential.

Financing urban infrastructure is a related issue. Although the quality of city life in India remains in the hands of top local officials, they do not have enough power to make investments in their own city. In addition, a significant portion of Indian people do not have access to banking facilities, so financial inclusion suffers. The Modi administration is adopting a new approach to regulation in financial inclusion, considering that the Indian banking industry has been overregulated. Along with these problems,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need to be changed. A committee has been created to attend to these problems. The model of regulatory reform within this committee is more or less creating an independent regulator within the democratic setup.

Korea has a sound growth story to emulate. It has grown above 10% for a consistent time, and India needs to do the same. Good quality intervention, which Korea benefitted considerably, is what seems to lack in India.

Session 4 **Enhancing Korea-India Trade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dia-Korea trade has many complimentary areas. Korea is a net importer of services and India is a net importer of goods. Korea is a major global player in manufactured goods, and India is a bigger player in services. Even so, bilateral trade has declined for many reasons and India'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been consequently rising to lofty levels. One important question that that needs to be examined is: Why is the utilization of CEPA so low?

One major reason seems to be high tariffs. Related to that is India's bevy of trading partners. Its multiple trade agreements have produced different tariff regimes, and companies do not which is best to utilize in various situations. Confusion originating from the unorganized MFN tariff database leads to the confusion in terms of the benefits of the CEPA. For instance, in terms of market access, Korean tariff lines are generally lower than those of India, but that for certain products in which India has comparative advantage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 tariffs are still high. Moreover, India also faces non-tariff barriers such as strict sanitation requirements in Korea that restrict the entry of Indian food products and cosmetics.

In addition, constant bureaucratic difficulties appear to have occurred on both the Korean and Indian sides. For instance is the delay of the POSCO project which is a very important investment from India's point of view. A POSCO cold rolling steel mill is scheduled for January 2015, and there is a strong interest to move forward and scale up the production base. Unfortunately, there seem to be non-tariff bureaucratic barriers such as the presence of Korean inspectors in every step. The inspections are very costly and a reasonable compromise seems necessary. Other unreasonable procedures should be eliminated. There have been many missed opportunities due to such non-tariff barriers, but it is encouraging to see that there is a political desire to dramatically move up the value chain.

All in all, the Korean share of investment in India has been very low. Investment flow has not increased since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India CEPA, unlike other agreements (Japan and Singapore). Moreover, Korean companies' experience in India has not been very positive because they prefer to engage in greenfield projects. Currently, more than 80% of Korean investment in India is concentrated into the manufacturing sector.

Likewise, Indian investment in Korea is mainly in the manufacturing. It is at a modest scale but is increasing, mainly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 Major Indian conglomerates that have invested in Korea include

Tata Motors Limited, Novelis Inc. (subsidiary of Hindalco Industries Limited), Tata Consultancy Services, Wipro and Mahindra Satyam.

The important question to ask is: “Can CEPA lead to regional integration?” India and Korea are actively engaged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hich can lead to regional integration and establishment of production networks. However, Korea’s commitments in other trade agreements are more extensive than what it has offered to India. This may have impacted market access for Indian companies. Areas of sound cooperation in India-Korea CEPA include energy, ICT, science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urism, health, and government procurement. With this in mind, the depth of the agreement is most important. More extensive economic agreements can lead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ut domestic reforms are needed in India to facilitate such agreements.

Due to India’s political change, Korea needs to reengage. During the state visit by the President Park in January 2014, both countrie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trade and cooperation in a wide range of areas. Instead of the term “upgrading CEPA,” the agreement itself needs to be re-structured into a balanced agreement that addresses the concerns of both sides. For example, in the ICT sector, possibilities of India’s software with Korea’s hardware manufacturing capabilities complement each other well. Likewise in the shipbuilding sector, Korea has the best technical know-how in ship design and assembly accounting for 36% in the world shipbuilding market. Korean shipbuilding companies can look into India as a model house. Infrastructure investment is also a possible area of collaboration but ultimately there has to be an understanding of how India operates because work has to be done at the state level. Without state level research, results will not be satisfactory.

There have been many significant FTAs signed during the last decade in East Asia and Asia as a whole.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200 FTAs under implementation and progress. India also has several FTAs. In the case of Korea, its FTA network has widened considerably since 2008. Korea has established the widest network in terms of economic size and number of FTAs. Today, almost 70% of Korea’s trade is expected to be covered under FTAs.

Global value chains, quality of FTAs and service liberalization are important topics in terms of upgrading the India-Korea CEPA. The importance of second unbundling (defined by Richard Baldwin) needs to be underlined. In order to attract investment and also join the global supply chain, it is important to have low trade-related cost and low coordination cost. Regarding this, there is a need for a strong service sector, especially in terms of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India proposed major economic corridors that would

consist of fast-track logistic systems set up next to national highways. Korea was a latecomer in terms of investments in these zones. Economic Corridors can provide opportunities for Korean investors to invest in industrial clusters catering to the needs of Korean companies, especially SMEs. Korean SMEs can also work with the Indian government in trying making similar success in India as they did in Bangladesh's Special Economic Zones (SEZs). For India, there are issues in cases of companies such as POSCO; these issues can be resolved through collaborative partnership.

These days, people talk about "comprehensive FTAs," in which the whole structure is closely linked to improve capacity the global value chain. Three leading Korean conglomerates (Samsung, Hyundai, and LG) could serve as typical examples. One Korean participant presented data which showed the global investment of these business groups. Hyundai's investments are comparably small. Samsung and LG's investments are mostly concentrated in China, the EU, and some South American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analyze why this is.

In terms of the quality of FTAs, the Korea-US, Korea-EU, and NAFTA are very good but Korea-US is the best and cannot be beat. The India-Korea agreement is comprehensive with respect to market access in goods and services (it is a bit broader than that of ASEAN), but there is wide room for improvement. For instance, there are some problems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Moreover, in upgrading the FTA, adjusting tariffs for the goods sector will not be easy. India's average tariff rate is fairly high. Even that of Korea is high for agricultural products. This places a burden on Korea even though India is not a major agriculture exporting country. India's tariff rates are slightly higher than Southeast Asian countries, similar to what is seen with Brazilian tariffs in South America.

Indian service sector also has extensive room for development. Basically, services and investment chapters should try to facilitate business as liberalization of goods can be very difficult. For India, the industrial base is less developed and there are high protective barriers as well as political issues. But reforms on services sectors can be a basis for development in manufacturing and consensus building.

One Korean participant noted that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ill be especially helpful for developing countries. Both the Indian and Korean governments should explore which part of the CEPA could be upgraded or explore how to increase the current utilization of the CEPA. Moreover, cooperation is needed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One area of cooperation should be on negotiations regarding RCEP. RCEP can be powerful in supporting and spreading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as well as resolving issues in existing FTAs. In this process, India and Korea need to play a crucial role for leading

the RCEP negotiations to successful conclusion. All in all, establishing a good partnership may always be the best policy.

Manufacturing sectors mainly grow through export stimulus. In the case of India, however, manufacturing is not geared for domestic markets, not external trade. The point of Prime Minister Modi's "Make-in-India" campaign has been to help develop Indian manufacturing and create employment. India is a huge market, so there is outsized business potential if you can tap into it.

Korea sees problems in India and India sees problems in Korea. This means that there is large room for improvement. Both the Indian and Korean side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the Korea-India CEPA. In this process, there needs to be a balance of benefits; for this, Indi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lobal supply chain. In this respect, participating in RCEP may be significant for the Indian economy in general as well as for updating CEPA. One Western economist's depiction of trade in Asia is two big FTA wheels: one powered by Japan, and the other by China. If these two wheels are not emerging, no Asian version of a large or mega FTA can be visualized. It is unsure how the Asian version of FTA regionalism may unfold, but the immediate issue is the growing number of FTAs in the region.

Upon hearing from the Indian side that there are few flights between India and Korea per week, one Korean participant pointed out that this is a sign of opportunity. He explained that this issue along with a variety of other agendas should be broadcast to attract more awareness to the Korea-India economic relationship.

Session 5 **Expansion of Mutual FDI and Industrial Cooperation**

Korea's investments in India started in 1988, according to the official data from Bank of Korea. Samsung, LG, and Hyundai Motors started to invest heavily in India in 1996 and in the late 1990s, Korea was one of the leading investing countries in India. The share of Korean FDI investment in India in 1996 and 1999 was more than twice of that of Japan's. But since 2000, the share of Korean investment in India decreased while Japan and Singapore's investmen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According to data from India's Ministry of Commerce, the Korea's share in cumulative direct investment is below 0.7% while that of Japan is 7.5%, which is more than 10 times higher than Korea. Singapore's cumulative investment share is also very high, reaching about 12%. The investment volume in an absolute

sense has not fallen. Instead, Korea's share has decrease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addition, Korea's investment in India is excessively dependent on big companies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Korean investments in India are typically greenfield-type, domestic market oriented and sole venture (100% ownership).

To reflect features such as company size and industry type, one Korean presenter explained a statistical model utilizing the dynamic time-series linear regression and 25 observations. The analysis implies that any plan to increase Korean investments in India should support SMEs as well as large companies in not only the manufacturing sector but in the service sector.

In one way, Korean companies have achieved what others have not: a strong foothold for further investment. Through domination of local markets in the initial stages via aggressive investment, Korean companies have secured a favorable market position in terms of product popularity, brand and company image. This has helped enhance the overall image of Korea and Korean products in India. Of course, this process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export growth, and employment in India. It is well known that Hyundai Motors is the largest exporting company in India.

Policy options to revive the stagnating Korean investments in India include reactivating big company investment in India and promoting investment by SMEs. Strengthening the support system for India-bound investment, like Japan, may be effective. In October 2014, India's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launched a team that shared problems and solutions with Korea (especially on CEPA issues). Upgrading this system may be a fruitful option. A more powerful enforcement system such as a regular bilateral summit is also necessary. This was done by Japan and Japanese investment increased dramatically. In terms of promoting SMEs, most Korean SMEs still feel it is difficult to invest in India without the alliances with large companies. More collaborative approaches between SMEs and conglomerates is needed.

India is unique in that post-reform, it achiev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sectors where one would not expect--IT services, the movie industry, etc. Some 55% of India's GDP is in the services sector, and growth rates in these sectors have exceeded 10% for a long time. Growth in the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sectors have been a little slower with the pharmaceutical industry being an exception. It has also achieved moderate competitiveness in the automobile sector. Another surprising aspect is the very early movement of Indian conglomerates in trying to become global. On the other hand, India's economy has underperformed in traditional advantages of developing countries: low wages and labor intensive industries. In India, imported labor-intensive goods constitute 80% of the domestic market. This

may be a result of a negative tariff system of imposing high tariffs on parts and components compared to finished products.

Skill levels in India are very high. Management capability is even higher. Many talk about a shortage of skilled workers, but it is not as insufficient as believed. Firms that are large enough to afford support and investment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 recruit young adults from all over India and train them successfully. Thus, there are competitive advantages for manufacturing in terms of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 ability due to the ecosystem that India provides. The real problem lies in the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Both handcuff the economy because the cost of movement from one factory to another is extremely high. This mitigates the cost advantages in terms of productivity. India has been focusing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but progress has not been as rapid as it should be. Currently, the new government is trying to invest resources in creating islands equipped with global standard infrastructure in order to reduce comparative disadvantage. Results of this new policy should be visible soon.

In this respect, most of India's economy has a positive attitude and is open to foreign investment. To eliminate the psychological barriers to foreign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pecific sectors that will strengthen business. One Indian participant suggested two sectors, information technology (hardware, smartphones) and ship-building, saying that Korea and India could benefit from a win-win partnership in the supply chain.

Another factor to consider is CEPA. The Korea-India FTA, or CEPA, has deep integration provisions such as investment,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harmonization of standards, competition policy, customs cooperation and IPR protection. If utilized effectively, these provisions may positively influence FDI inflow. Widespread opinion says integration provisions of a FTA have a bigger impact on FDI than trade provisions. If it can be found that CEP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Korean FDI, CEPA should be upgraded sooner.

One Korean participant commented on how shocking it was to see such low numbers for Korean FDI in India. It seems as if Korean companies have far less interest now than they in the 1990s. He continued to note that the two countries may have failed to shorten the distances between them. In business management literature, the four distances that determine investment are physical, cultural, economic and regulatory. There have been 13 Korea-India Dialogues so far, but it seems that these have failed to close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ll four distances between Korea and India have not shortened.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far less frequent than expected (physical distance), there is very little cultural exchange relatively, income gap still exists (economic distance) and regulatory distance is still very wide.

The plan for the dialogues should be redrawn to include specific measures. For instance, there should be more exchange in the movie industry. Having two or three industrial parks or special economic zones that can cater to the needs of Korean SMEs (model proposed by an Indian participant) is a way to reduce the distance, especially cultural, physical and regulatory.

South Korean investors should also have longer perspectives. In a couple of decades, it is likely that the Indian Ocean region will emerge with immense potential. For example, the recent economic pickup in Africa opens an opportunity for India to act as the continent's offshore base. Therefore, investment should be analyzed in long term perspectives, not only short term. This Dialogue could help initiate such perspectives and inform Korean investors about the merits of a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in India. Although the current situation may produce disappointments, the potential for India-Korea industrial collaboration is great if necessary policy measures are implemented.

4. 참석자 명단 List of Participants

KOREAN PARTICIPANTS

AHN Byung-joon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HN Choong-Yong	Co-Chair of Korea-India Dialogue;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CHAE Wook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CHEONG Inkyo	Professor, Inha University
CHO Choongjae	Head of South Asia Team, KIEP
CHO Hae-hyeong	Chairman & CEO, Nara Holdings Corporation
CHO Tae-yul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K
HONG Kyttack	Chairman & CEO, KDB Financial Group
HONG Sung-won	Secretary to Vice Minister, MOFA
JAUNG Hoon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JUNG Ku-Hyun	President, SFIA
KIM Dalchoong	President Emeritus, SFIA;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KIM Jin Hyun	Chairman, World Peace Forum
KIM Jong Seok	Professor & Dean, Hongik University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KIM Woosa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YUN Jongho	Director, Bilateral Economic Promotion Division, MOFA
Lee Hoesung	President, Council on Energy & Environment Korea
LEE Hong-Koo	Chairman, SFIA; Former Prime Minister, ROK
LEE Soon-cheul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ARK Jae Jeok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ARK Jin	Executive Director, Asia Future Institute
SUH Jin Kyo	Senior Research Fellow, KIEP

INDIAN PARTICIPANTS

Ajay CHANDPURIA	Defence Attache, Embassy of India, Seoul
Sanjana JOSHI	Senior Consultant, ICRIER
Rajat KATHURIA	Co-Chair of Korea-India Dialogue; Director & CE, ICRIER
Arpita MUKHERJEE	Professor, ICRIER
Anil PADMANABHAN	Deputy Managing Editor, MINT
Vishnu PRAKASH	Ambassador of India to Korea
Upender S. RAWAT	Deputy Chief of Mission, Embassy of India, Seoul
Ajay SHANKAR	Member Secretary, NMCC, India
Hemant Krishan SINGH	Professor, ICRIER
Neeharika SINGH	First Secretary (Political) & Director, Indian Cultural Centre, Embassy of India, Seoul
Yashwant SINHA	Former External Affairs Minister, India
Mijito VINITO	Second Secretary, Embassy of India, Seoul

5. 프로그램 Program

NOVEMBER 6 (THU)

19:00 **Welcome Dinner at Indian Ambassador's Residence**

NOVEMBER 7 (FRI)

09:00 **Opening Session** (*Grand Ballroom 1, 3F*)

Co-chairs:
 AHN Choong-Yong, *Co-Chair of Korea-India Dialogue &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Rajat KATHURIA, *Co-Chair of Korea-India Dialogue and Director & CE, ICRIER*

Opening Remarks:
 JUNG Ku-Hyun, *President, SFIA*
 Yashwant SINHA, *Former External Affairs Minister, India*

Congratulatory Remarks:
 Vishnu PRAKASH, *Ambassador of India to Korea*

09:40 - 11:00 **Session 1 -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 and New Leadership**

- Major changes expected in policy directions under the new leadership
- Problems with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and possible reforms
- Effective way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national integration

→ *Keywords: Political Leadership and Reform, National Integration, Conflict Resolution*

Chair:
 Yashwant SINHA, *Former External Affairs Minister, India*

Speakers:
 Anil PADMANABHAN, *Deputy Managing Editor, MINT*
 JAUNG Hoon,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Discussants:
 Hemant Krishan SINGH, *Chair Professor for Strategic Studies, ICRIER*
 AHN Byung-joon,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11:00	Coffee Break
11:20 - 12:40	Session 2 - Cooperation in Security and Diplom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regional implications • Addressing “North Korean Problems” • Strengthening bilateral and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Korea <p>→ <i>Keywords: Power Shift and Clash, Security Architecture, Bilateral and Regional Cooperation</i></p> <p>Chair: PARK Jin, <i>Executive Director, Asia Future Institute</i></p> <p>Speakers: Hemant Krishan SINGH, <i>Chair Professor for Strategic Studies, ICRIER</i> PARK Jae Jeok, <i>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i></p> <p>Discussants: Sanjana JOSHI, <i>Senior Consultant, ICRIER</i> KIM Sung-han, <i>Professor, Korea University</i></p>
12:40 - 14:10	Luncheon Session (<i>Grand Ballroom 2, 3F</i>) <p>Chair: JUNG Ku-Hyun, <i>President, SFIA</i></p> <p>Guest Speaker: CHO Tae-yul, <i>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K</i></p>
14:30 - 15:50	Session 3 - Economic Performance and Deregulation (<i>Grand Ballroom 1</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orming major economic regulations • Fostering new growth engines for the future • Ensuring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p>→ <i>Keywords: Regulatory Reform, New Growth Engin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i></p>

Chair:

Ajay SHANKAR, *Member Secretary, NMCC, India*

Speakers:

KIM Jong Seok, *Professor, Hongik University*

Rajat KATHURIA, *Director & CE, ICRIER*

Discussants:

Anil PADMANABHAN, *Deputy Managing Editor, MINT*

AHN Choong-Yong, *Chairman of NCCP*

15:50

Coffee Break

16:10 - 17:30

Session 4 - Enhancing Korea-India Trade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Upgrading Korea-India CEPA
- Prospects for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bilateral FTAs, CJK FTA, RCEP and TPP)
-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Korea

→ *Keywords: Korea-India CEPA, RECP, TPP*

Chair:

CHAE Wook,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Speakers:

Arpita MUKHERJEE, *Professor, ICRIER*

CHEONG Inkyo, *Professor, Inha University*

Discussants:

SUH Jin Kyo, *Senior Research Fellow, KIEP*

Vishnu PRAKASH, *Ambassador of India to Korea*

18:00 - 20:00

Dinner Session *(Studio 7, 6F)*
Chair:

AHN Choong-Yong, *Chairman of NCCP*

Guest Speaker:

Yashwant SINHA, *Former External Affairs Minister, India*

NOVEMBER 8 (SAT)

09:20 - 10:40

Session 5 - Expansion of Mutual FDI and Industrial Cooperation

(Grand Ballroom 1, 3F)

- Key obstacles to mutual investment and effective investment policy
- Industrial cooperation in promising sectors
- Strengthening business partnership by promoting SME cooperation

→ *Keywords: Investment Policy, Industrial Policy, SMEs Cooperation*

Chair:

JUNG Ku-Hyun, *President, SFIA*

Speakers:

CHO Choongjae, *Head of South Asia Team, KIEP*

Ajay SHANKAR, *Member Secretary, NMCC, India*

Discussants:

Arpita MUKHERJEE, *Professor, ICRIER*

LEE Soon-cheul, *Professor of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40

Coffee Break

10:50 -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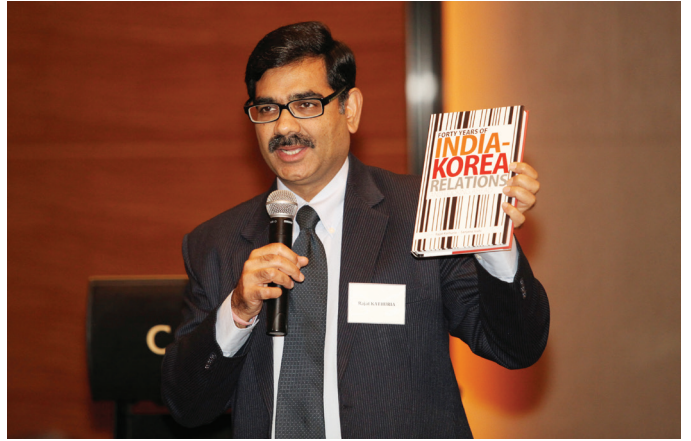
Closing Session and Signing of Joint Statement

Speakers:

JUNG Ku-Hyun, *President, SFIA*

Rajat KATHURIA, *Director & CE, ICRIER*





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우.110-160) 서울시 종로구 종로51 종로타워빌딩 22층

Tel. 82-2-2198-3030

Fax. 82-2-2198-3032

E-mail: seoulforum@hotmail.com